
YWCA 2021년 10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

성평등 교육

남유진(서울대학교)

목 차

-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 02 젠더폭력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
-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 04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 05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성평등 교육 관련 공약

5대 국정 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과제목표

-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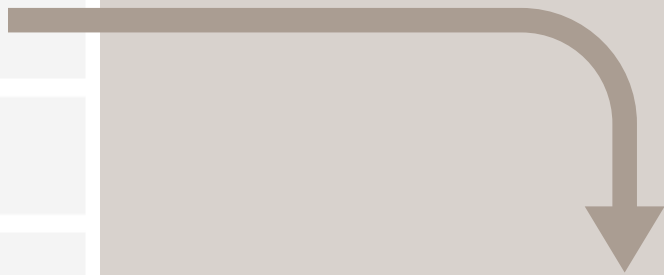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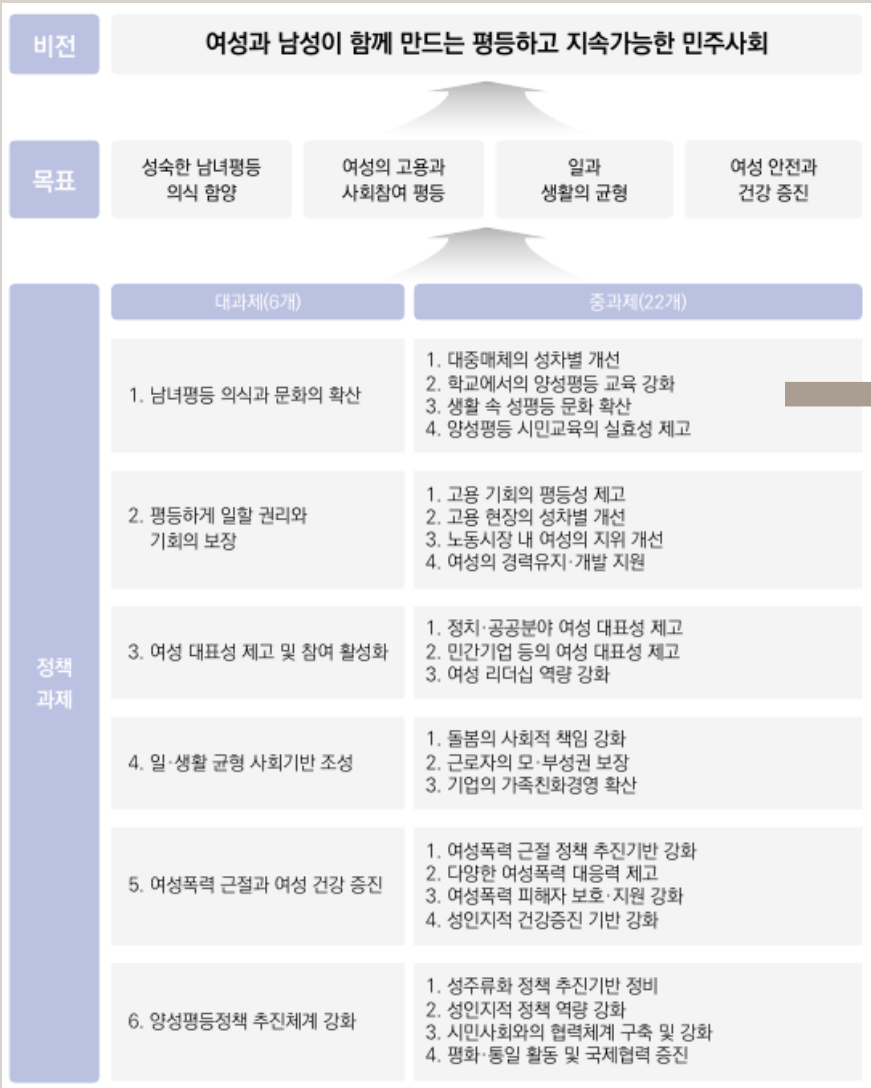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 대표성 제고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 성평등 교육 강화

✓ 언론 · 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발표- 2017.12.20, 관계부처 합동



주요 핵심과제

-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 1. 남녀평등 의식 문화 확산 >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p>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 초중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p>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p>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p>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의 생리공결제 지속 운영 및 안내 ▪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체계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초중등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강화 ▪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01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교육

2018년 2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 청원에 답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통합 인권교육 추진

-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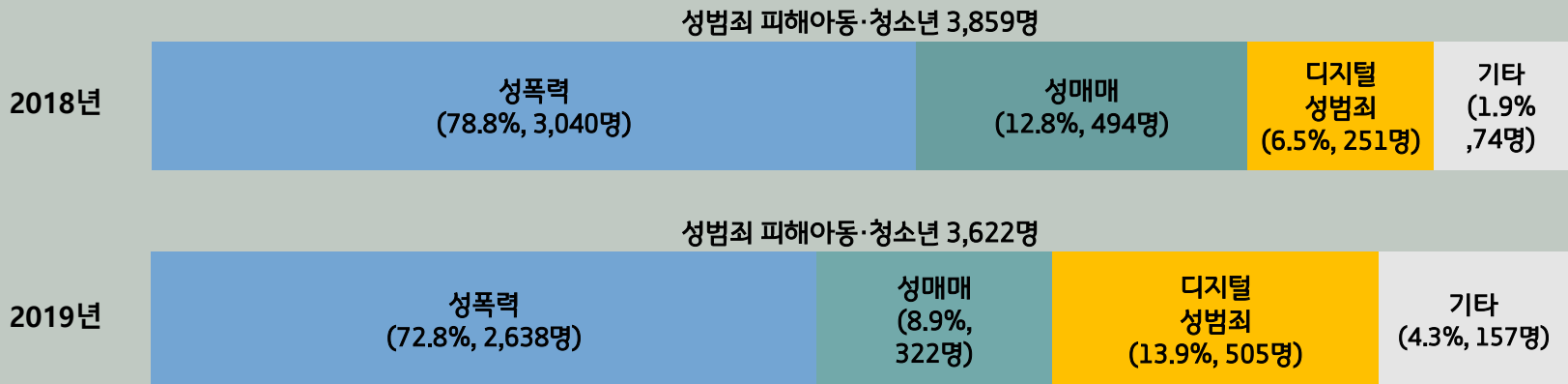
- 교장, 교감 대상으로 인권 교육 연수과정 연내 개설
-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때 인권교육 추가
-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 20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결정시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하는 방안 권장 계획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필요

-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성범죄, 성평등 등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함.



출처: 여성가족부(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필요

- 현재 활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2015학교성교육표준안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입력 2019.07.10 04:40

1 0

'여성 외모, 남성은 경제력' 등 인식 변화 못담아 비판 목소리 올해 상반기 보급하기로 했던 성교육 표준안 개편 작업은 중단



2017년 8월 서울 경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위한 16,698명 서명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교육부터 바꿔라" 10대들이 직접 정책제안

이영경 기자 | 입력 : 2020.10.20 17:25 | 수정 : 2020.10.21 10:51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 대표단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개편을 요구하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월드비전 제공

잇따른 10·20대 성범죄...문제는 '성교육'이다

성교육 유명무실..."성교육 전담교사·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이상현 기자 | 입력 : 2020.04.18 06:01:01 | 수정 : 2020.04.18 09: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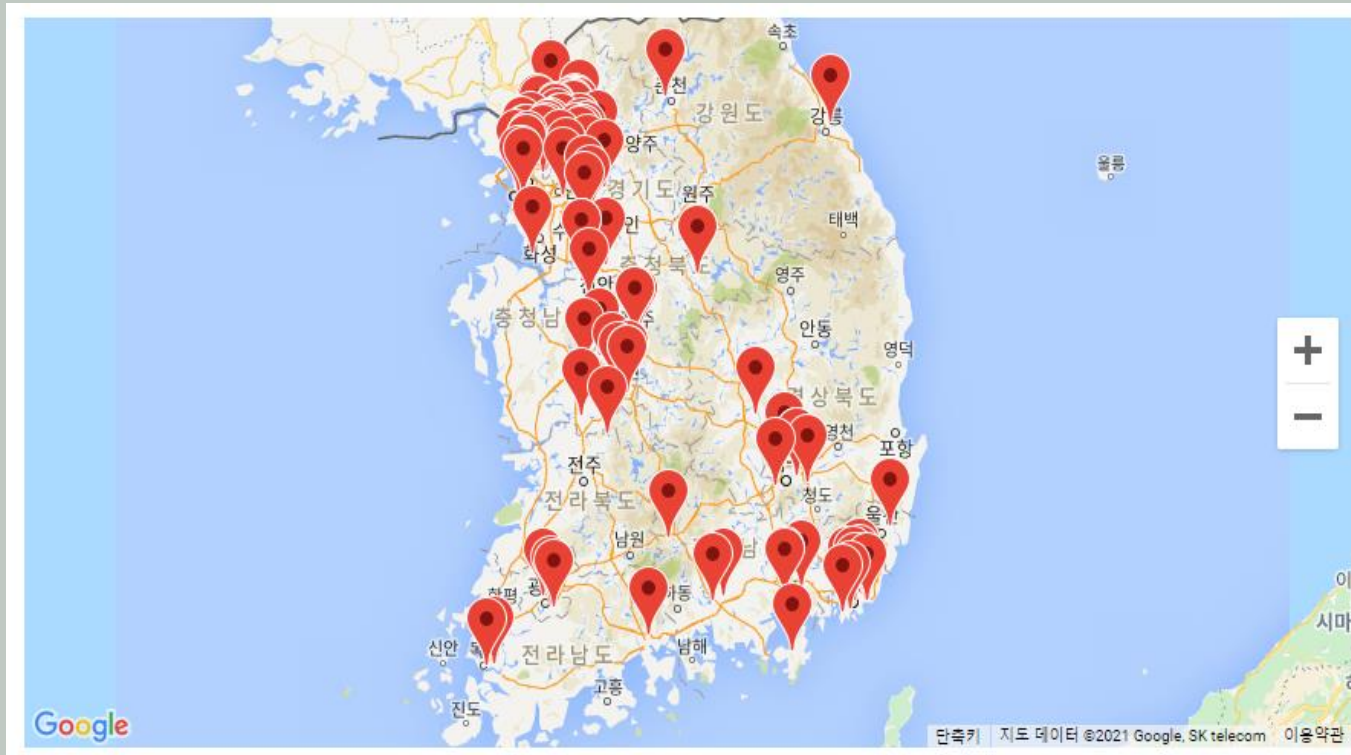
3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필요

- 스쿨미투, n번방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 중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스쿨미투 전국지도 100개 학교(2020.2. 현재)]

출처: [스쿨 미투 현황 | 정치하는엄마들](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학교급·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현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2019) 초·중·고 교육 지도서 및 법교과 교수학습자료(6종) / (2020) 양성평등교육 수업자료집(2종) 및 양성평등 가이드북(1종) / (2021) 양성평등교육 영상 콘텐츠(2종) 개발 중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예비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원 현장지원단을 양성하고 있음.

- ✓ 성평등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기준 제정
- ✓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성평등 지표 개발 및 적용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교육실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각급학교와 온라인 학습(e학습터 등의 플랫폼)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자료 저장소(아카이브) 형태로 구축·제공*할 계획임.

* (2021) 콘텐츠 자료보관(아카이빙) → (2022)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연계서비스 연계 → (2024~)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 통합·제공

-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정규교육과정 내 의무화
- ✓ 포괄적 성평등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정규교육 과정 내 의무화, 질 관리

02 젠더폭력 예방·대응교육 의무화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강화 및 자격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성비위 교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도록 교원 양성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립교원 징계 시 국공립교원의 징계 기준 준용(2019.10. 사립학교법),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사립학교의 이행 의무화(2019.3. 사립학교법), 성비위 징계 교원 일정 기간 담임 배제(2020.12.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교원성비위 사건 피해자 징계의결 결과 통지 및 위원회 구성 성비 규정(2019.8/2020.7, 교육공무원징계령)

** 성범죄 처벌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2020.12.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 자격 취득 시 교원 양성과정에서 연 1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2021.2.교원자격검정령)

- ✓ 예비교원 성평등교육 필수 이수 시간 확대(양성 단계 4회 이상→최소 8회 이상)
- ✓ 교원자격 취득 시 관련 시험으로 자격 부여 법 제정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학내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 필요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 올해부터 학교와 기관에 연2회 의무점검을 안내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이 발생함(서울고교 남교사의 여학생기숙사, 여직원화장실 100명 불법촬영 등).
-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학생휴게실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적 범죄에 적확한 대응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	북부								
2015년	77	18	3	2	6	1	-	7	13	8	2	-	2	3	1	4	4	3
2016년	86	7	5	19	6	2	3	-	24	1	6	2	5	-	1	3	1	1
2017년	115	19	7	5	6	4	1	3	29	8	8	6	7	2	1	4	5	-
2018년	173	29	7	5	8	5	10	8	41	12	8	9	6	9	4	5	7	-

[2015-2018 지방청별 학교 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현황(초중고대학교 합계)]

출처: 학교내 '몰카' 범죄 매년 증가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23>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 공개 의무화 필요

- 2014년부터 교육부가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경징계 차원, 징계 만료 후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교단 복귀가 가능함.
- 교육부 차원의 성범죄 교원 처벌은 현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정도임.
- 스쿨미투 가해자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도 공개하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 신상과 처리 과정의 공개를 꺼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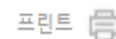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송고시간 | 2019-05-14 11:31



'스쿨 미투' 연루 교사 469명...학교명조차 비공개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21.09.06 20:23 수정 2021.09.06 22:25 조회 2,264



해임·'파면' 22.5% 불과

2021.10.19 11:09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필요

- 스쿨미투 고발 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시 학교, 교사 차원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 발생함.
- 이후에도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이 철저히 분리되지 않은 채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산 스쿨 미투' 피해 학생 실명 전수조사...2차 피해 논란

송고시간 | 2019-03-25 17:45



조정호 기자
기자페이지

경찰도 실명 밝힌 학생 중심으로
시민단체 "폐쇄적인 학교 특성상
교육청 "가해자 처벌하려면 실명



'스쿨미투' 교사들 여전히 교단에...폭로 학생에겐 고소장

기사입력 2020.09.29. 오후 12:42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41 | 21

가 | | |

HOME > 사회 > 인권복지

검찰법원이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2차 가해에 학교 떠나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6.22 13:15 | 수정 2021-06-23 06:26 | 댓글 0

"피해자 신원비밀 누설 금지 의무 저버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권익위에 검사·재판부 징계 요청...공수처 고발도
2차 가해 저지른 교사에게
형사 고소·민사 손해 청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연대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유발한 검사와 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이세아 기자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확립 및 지표 개발 적용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지난해 전국 초·중등학교와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점검을 실시(2020.7~8.)하고, 불시 점검 체계(연간 2회 이상)를 마련하였음.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교내 시설물에 대한 학교장 주관 수시 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단위학교 점검 안내서 배포), 관계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점검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불시 점검 체계 확립
- ✓ 안심 점검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 학내 성평등 및 안전에 대한 지표 개발 및 적용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성범죄 교원 교원자격박탈 및 신상 공개 의무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교육기관 내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였음.

-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영구적 교원자격 박탈 관련 법 제정 및 강제성 부여
- ✓ 성범죄 교원의 신상 및 처리 과정 결과 공개 의무화
- ✓ 교육 분야 성범죄 처리와 결과 공개에 대한 투명성 제고

03 교육현장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강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교육기관 내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였음.

- ✓ 스쿨미투 등 교육현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법 제정
- ✓ 위클래스(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나 시도교육청 공론화센터 외 학내 성범죄 특수성 고려 1:1 신고 및 상담 핫라인 구축

04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필요

- 2019년 12월,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여 교육분야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목적,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출범함.
- 2021년 8월에 이르러서야 ‘스쿨미투’ 관련 사안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전담하는 내용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분과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게 됨.
- 성희롱·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 8개 부처에 신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운영
- 잦은 인사 교체와 공백으로 교육 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가까움.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필요

-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는 현재 교육청(17개 교육청 중 14개) 차원에서 운영 중으로 전체 교육청에 대한 설치가 급선무이며, 최소인원, 겸직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인 아닌 실질적 학내 성폭력 해결 전담 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대학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담당기구 운영은 대학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규와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부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약 80.46%가 상담이나 성희롱 관련 지식이 전문한 교수들을 센터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작성한 것으로,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261개교가 대상이 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학들은 아예 해당 센터가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 성고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나, 관련자 부재 등의 이유로 회신을 거부한 대학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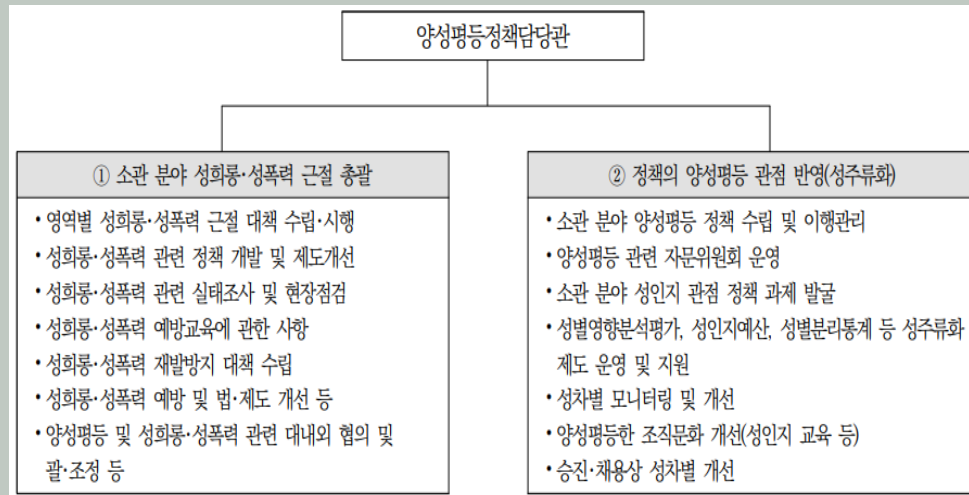
출처: 있으나 마나 한 '대학 성평등센터'... '非전공' 센터장이 80% (sisajournal.com)

- 대학 정보공시에 매년 추진 중이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도 올해 10월부터 실시함(전국 460개 대학(본교/분교/캠퍼스 구분)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조직과 인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규정 제정 여부 등 운영 현황 등).

04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

- ✓ 성평등담당부서로서의 교육부 양성평등정책 담당실 역할 확립 및 내실화
- ✓ 교육부 주도 각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 양성평등정책 업무 검직 금지 및 전문성 제고
-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역할 확립 및 권한 확대
- ✓ 성평등교육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한 교육분야 성평등 정책의 분절성 극복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체계화 필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

(교육부, 2021.8.12)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및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중앙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였음.

-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021.3.)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022.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2022)을 추진하며, 국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기존) 부속기관인 인권센터(고충상담원) 주관 조사·심의 → (개선) 학내 감사 담당(또는 인사·복무 담당) 기구와 인권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가해자 조사·심의기능 강화

학교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규모·기능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학교장 등 고위직 사안에 대한 상급 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2021) 14개 교육청 설치 → (2022년) 전체(17개) 교육청 설치 목표

※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전담조직 구성여부 배점 확대,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인력 지원

- ✓ 각 교육지원청(176개)/대학별 성평등 센터 설치
- ✓ 성평등 센터장의 적합성 검증 및 전문성 제고
-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및 실태 조사 결과 공개 명시 의무화

05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05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교육 직업 훈련 영역 성평등 지수는 보건영역(95.7)에 이어 두 번째로 93.9점을 기록,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임(여가부, 2020).
-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사회적 사건의 발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형태의 교육과 접근이 요구됨.



[분야별 성평등 수준]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05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

성문화는 그것이 표현되는 미디어, 영화, 드라마, 교육과정, 사회규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 YWCA 성평등운동, 2019).

- ✓ 학부모 성평등 교육 확대 실시
- ✓ 유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 성평등 모니터링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 ✓ 언론, 미디어 콘텐츠 종사자 성평등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확대, 사전이수제 도입
- ✓ 청소년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감사합니다.

남유진

etudier@snu.ac.kr